



강제징용 피해자 정재원씨(오른쪽)가 아시안 인권단체들의 지원성명을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하고 있다. 정씨 옆은 정의회복위원회 정연진 회장. <이승관 기자>

10여개 아시안 인권단체 징용소송 국무부자세 비판

“정재원씨 피해소송서
일본정부 입장 지지”

10여개 아시안 인권단체들은 2차 대전 당시 일본 시멘트 제조업체 오노다사에서 강제노동을 겪었던 정재원씨가 제기한 피해

보상 소송에 개입해 일본측을 지지하고 있는 마 국무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일본정부와 기업들은 지난 역사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LA 다운타운 리틀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그나

티우스 덩 항일전쟁사 보존연합회 대변인은 “유럽에서 진행됐던 유대인들을 위한 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했던 국무부가 이 소송에서는 일본측을 지지하는 이중잣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제의 만행은 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며 일본기업들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진 정의회복위원회 회장은 “강제징용, 위안부, 군인 등으로 끌려간 피해자만 당시 한반도 인구의 30%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피해자들은 반세기가 넘게 사과와 보상을 기다려 왔으며 과거를 잊으면 미래도 없음을 일본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재원씨 소송과 관련, 오는 11월4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열리는 ‘캘리포니아주 징용배상 특별법 354.6조’(일명 헤이든 법)의 위헌여부 심사를 앞두고 이 조항의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측과 국무부를 압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성락 기자>